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후 한국군의 대응은 이 소동을 좀 더 심각한 사태로 키울 뻔했다. 윤석열 정부가 "확전의 각오"로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상공으로 침투시켰던 것이다. 자칫 남북 간 교전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북한 무인기] 1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호전적인 언사를 내뿜고 있다.

무인기 남하를 두고 북한의 무모한 "긴장 조성" 행위라는 비난이 많다. 그렇지만 이번 소동의 전후 맥락을 살펴 봐야 한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주되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당연히 한·미·일 협력은 북한도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사일 방어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군당국들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12월 20일 미군의 F-22 스텔스기가 연합 훈련을 위해 군산으로 왔고, 전략 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에서 한국 전투기들과 함께 연합 공군 훈련을 했다. 23일에는 미군 정찰기인 리벳조인트가 한국 상공에 나타났다.

이렇게 첨단 무기와 대규모 연합 훈련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작고 느린 무인기 비행을 두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군비를 증강하고,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이 포함된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에 2023~2027년 30조 원이나 지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등 주요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만간 위성을 실은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음 날 북한 외무성은 일본 안보 문서 개정을 "일본의 새로운 침략 노선 공식화"로 규정하고,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과업(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비행은 미·중 간 제국주의적 갈등이 한반도 불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윤석열은 북한 무인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비 증강을 강조했다.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무인기 탐지 자산 강화와 대응 무기 체계에 향후 5년 동안 5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드론 부대 확대도 서두르기로 했다. 여당은 유사시 미국 핵무기의 제주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불안정과 긴장 증대만 낳을 뿐이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노동자 연대> 선정 2022년 국내외 주요 뉴스, 윤석열의 노동개혁과 노란봉투법, 우크라이나 전쟁,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윤석열의 2023년 경제 정책, 북한 무인기 소동, 이태원 참사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두 달 윤석열은 시종일관 책임 회피, 민주당은 깨지락거리는 대응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한 정부의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에 있다.

그렇다면 최고 통치자이자 참사 직전 마약과의 전쟁을 거듭 지시한 윤석열이 최대 책임자인 것이 당연하다.

참사 후 유일하게 수만 명이 모인 이태원 참사 추모제 또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였다.

윤석열은 정치적 책임 묻기가 결국 자신을 향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엽적 책임을 내세우며 그 뒤에 숨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은 야당들의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이상, 경찰 특수본의 최종 지휘자는 다름 아닌 이상민일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지금까지 특수본은 떠들썩하게 압수 수색을 87곳이나 하고, 2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구속 수사는 12월 23일에야 시작됐고, 그 대상도 일선 책임자 4명(용산경찰서 전 서장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불과하다.

야당의 헛발질

특수본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말들을 하며 희생자 탓하기를 부추겼다. 또, 강제력도 없



는 국정조사마저 파행시키며 뻔뻔하게 나왔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힘에 맞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게으르고 굵뜨며 결정적 순간에는 배신적이었다.

민주당은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사법적 책임을 염두에 둔 진상 규명 요구를 앞세웠다. 윤석열 책임론을 회피했으

므로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대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 요구 등을 부각시켰다. 이는 대중의 시선을 거리의 윤석열 퇴진 운동에서 자신의 흠그라운드인 국회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정조사 문제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연동시키는 합의를 해, 국정조사 시간을 줄여 버렸다.

이상민 해임 문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 대신, 윤석열이 거부하면 그만인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등 개혁주의 좌파들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책임을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 운동과 거리를 두며, 특히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조했다.

자본주의 야당과 개혁주의 ‘좌파’들의 기회 탕진 속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내몰릴 뻔했던 윤석열은 시간을 벌고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특히, 화물연대 투쟁이 패배하는 것을 방임한 노동조합 지도층이 이에 큰 구실을 했다.

퇴진 운동의 구심 유지하기

그러나 윤석열과 우파는 결코 자신이 총만한 것이 아니다. 집권 8개월도 안 된 정부가 지지율보다 반대가 훨씬 많다.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화물연대 탄압, 뒤이은 노동개혁 공격, 복지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그러한 불만은 갈수록 더 누적되고 있다.

참사의 진정한(정치적) 책임자이자 온갖 개악들의 집행자 윤석열에 맞서 싸우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굳건히 지속되어야 하고, 생계비 위기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과 연결되면서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TV

2023년 경제 전망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1월 4일(수) 오후 8시 | 발제 강동훈 (노동자연대 정책위원)

참가신청 bit.ly/0104-meeting

▶ 토론의 날!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생중계도 가능합니다.
☎ 02-227-2395 00-1008-2028 (모바일 전용)
▶ 카카오톡 '이웃연대' 노동자연대 모임이든 환영합니다